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때 :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곳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주최 : 평화재단

● 프로그램 ●

14:00	개 회
14:05	여는말 법 료 평화재단 이사장
	사 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14:10	발 표 1 한반도 긴장위기와 북한주민의 삶과 희망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발 표 2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 표 3 북한주민이 원하는 삶과 희망에 대하여 리성옥 새터민
14:55	토 론 1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토 론 2 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토 론 3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4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5:35	휴 식
15:50	종합토론
16:55	닫는말 법 료 평화재단 이사장
17:00	폐 회

● 차 례 ●

03 모시는 글

- 05 발 표 1 한반도 긴장위기와 북한주민의 삶과 희망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 16 발 표 2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4 발 표 3 북한주민이 원하는 삶과 희망에 대하여
 리성옥 새터민
- 26 토 론 1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 31 토 론 2 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 33 토 론 3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6 토 론 4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정색된 남북관계는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설의 확산, 연이은 북한의 대남강경 성명전,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한 개성공단 통행의 차단과 허용 반복, 북한의 4월 5일 우주로켓 발사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로켓발사의 유엔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제 사회는 물론 남북한에서도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주민들의 삶입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대미·대남 선전용도 있지만, 북한내부의 체제단속을 꾀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하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산과 이로 인한 비사회주의의 만연을 이유로 북한당국은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고 시장폐쇄조치를 단행하려 합니다. 배급과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당국의 방침을 따를 수가 없고 간부들조차도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외부 적들의 준동과 위협을 내세워 주민들을 통제, 단속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생명은 후순위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북한당국의 긴장조성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면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삶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한반도 긴장위기 속에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위기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심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 긴장위기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들의 삶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긴장과 그에 따른 위기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가져올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P**

2009년 4월
평화재단 이사장 범 루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3

한반도 긴장 위기와 북한 주민의 삶과 희망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 1. 남북 관계 긴장 국면과 북한 주민의 삶
 - (1) 북한 사회 배경
 - (2) 한반도 긴장 위기 국면 도래
 - (3) 2008년 남북 관계 경색 국면과 북한 주민의 생활
- 2.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
- 3. 한반도 긴장 위기 속에 가려진 북한 주민의 고통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5

발 표 1

한반도 긴장 위기와 북한 주민의 삶과 희망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1. 남북 관계 긴장 국면과 북한 주민의 삶

(1) 북한 사회 배경

- 1) 2008년 제 2의 고난의 행군 시작
 - ①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연속 평안도와 황해도 경작지 수해로 곡물생산량 타격
 - 평안도와 황해도는 군량미 생산기지(일부 지역, 평양 시민들의 식량 공급처)
 - 2006년 수해로 2007년 농업 생산량 10~15% 감산 추정
 - 평양, 6개월간 식량 배급 중단
 - ②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대폭 감소
 - 남한 정부의 식량 차관 및 비료 지원 중단
 - WFP 통한 식량 지원 대폭 감소
 - ③ 식량난으로 주민 고통 증가
 - ‘제 2의 고난의 행군’ 도래, ‘지주 마누라 동냥 다니는 해’
 - 춘궁기 북한 전역에서 농민과 취약계층의 다수 인명 피해 발생
 - 가족 해체 현상·꽃제비 및 방랑자 증가
 - ④ 생계형 범죄 만연
 - 궁핍한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총동적 폭력 비밀비재
 - 폭력과 강도·절도와 사기사건 등 생계형 범죄 증가

2) 사회 통제 체계의 심각한 이완 발생

① 생계난으로 조직 이탈 현상

- 직장 출근율, 학교 출석률 저하

예) 2009년 현재 단천 철재 일용품공장 300명 정원에 1일 평균 10명 출근

" " 시계공장 200명 정원에 1일 평균 5명 출근

2008년 춘궁기 황해남도 농촌 학생들 70-80% 학업 중단

② 사회동원 참가율 저조

③ 생활 총화, 정치사상강연회 참가 저조

- 출석부에 확인만 하는 형식적 강연회가 대부분
- 인민반장들, 강연 참가했다는 본인 서명 받기에 급급함

④ 군인 사기 저하

- 군량미 조달 차질, 사병들 만성적인 영양실조 및 탈영 현상 만연

3) 당과 국가 기관, 간부들에 대한 불신

① 당 정책 불신

- 군사력 강화와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는 정책 비판
- 장마당 단속 조치 등은 주민들의 생존에 직간접적 위협
- 2008년 3월 청진, 여성상인들 장마당 통제에 집단 저항

②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반발

-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하는 시장 관리, 안전원들과 몸싸움
- 부당한 대우에 저항, 안전원과 보위원에 대한 보복 행위 빈발
- 단속감열원이나 상급 기관의 민폐에 불만 표출
- 군인들의 절도, 강도 등 심각한 대민 범죄행위에 신소 제기
- 지역 간부들, 중앙당의 단속방침과 주민들의 반발 사이에서 줄타기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7

(2) 한반도 긴장 위기 국면 도래

1) 2008년 4월 1일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비난

- “리명박 력도의 반북대결책동이 과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한’
방안 등 발표로 주민들의 남한 정부 적개심 강조

2) 미국에 대한 양면적 태도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피하지만, 대내적으로 반미 사상 교육 실시
- “미제는 우리 인민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 “미국놈들의 그 무슨 <선심>에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북핵과 로켓트 발사로 애국심 고취

- 북핵은 민족의 자존심
- 광명성 2호 발사 보도,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자부심 고취
- “없이서 201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결한 피와 땀을 바치면서 2012년을 마중하자”

4) 남북 대결구도로 당면한 경제난과 식량난 책임 회피

- 경제난과 식량난은 국방력 강화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제로 상정
- 다수의 중앙 간부들, 주민들의 생계 불만을 국가안보에 무지몽매한 때문으로 인식
- 북한 지도부, 국방력 강화가 체제 유지의 가장 확실한 보루라고 생각
- 북한 지도부,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다는 걸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
- 북한 지도부의 지향은 사상 강국, 군사 대국

(3) 2008년 남북 관계 경색 국면과 북한 주민의 생활

<표> 2008-2009남북관계 일지와 북한주민생활

일시	남북한 관계	북한 주민 생활
2008 03.19	남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 발언	
03.26	남한 이명박 대통령.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치는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고 발언 북측에서는 6.15와 10.4공동선언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 "핵을 끼고는 우리가 통일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인 경협을 하기도 힘들다"고 해 '핵-남북경협' 연계 공식화	● 함북 은덕군 군수공장, 청진 김책 제철소 등 출근을 저하 ● 평북 풍천, 천마, 의주, 황남 제령 등 각 지역 배급 중단 ● 곡창지대 농장원 식량 배분 중단 ● 평양 4월부터 6개월간 배급 중단 ● 쌀 가격 한 달여 사이 1,300원에서 2,000원대로 급상승, 남포 사상 최고 2,050원 ● 옥수수 가격도 700원대에서 1,000원대로 급상승, 남포 사상 최고 1,050원
03.26	남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리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대북압박정책 시사 발언	
03.26	남한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겠다고 해 대북신제공격론 시사	
03.27	북한 개성공단 경험사무소 남한 당국자 추방	
03.28	북한, 서해상에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회 발사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군사충돌 경고	
04.01	북한 노동신문 대남비방 집중포화 시작	● 구급시설, 꽃재비보호소, 고아원 등에서 아사 발생 ● 평안남도 양덕군 주민 아사 발생 (2006, 2007 대충수 최대 피해지역)
05.30	북한 서해상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회 발사	● 황해북도 사리원시 교외 농촌지역 리(마을)당 매일 1~2명 아사 발생 ● 황해북도 금천군 농장마다 매일 1~2명 아사 발생 ● 방랑자와 꽃재비 수 증가 ● 황해남도 거의 전역에서 아사자 발생 ● 황해남도 농촌 아이들 70~80% 학업 중단
07.11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황해남도 태안군 주민들 폭증독자 증가 ● 태안소 어린이들 영양실조 증가 ● 7월 강원도 식량난 황해남도 앞질러 최악 ● 전국적으로 꽃재비 증가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9

10.02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 단지 살포 중단 요구	● 전국 군량미 우선 확보 방침 ● 농민들, 낱알 흠지기 전쟁
10.16	북한 노동신문,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11.12	북한 판문점 적십자 전화 차단 및 육로 제한 경고	● 애국미 바치기 운동 시작
11.24	북한 개성관광, 남북 철도 운행 중단 선언	
2009 01.01	북한 신년공동사설, 6.15와 10.4공동선언 이행 촉구	
01.17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전면대결태세 진입" 발표	● 황해남도 연백별 농장 4~6개월 식량분배 ● 2008년 출근기 때 사망한 가족 있을 경우 급속도로 가족해체 ● 자살자, 꽃재비 증가
01.30	북한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 합의 전면무효, NLL 합의 폐기" 발표	
02.01	북한 노동신문, "경고 외면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논평	● 작년 출근기 때 사망한 농민들이 많아 농촌인력 태부족 ● 녀맹원들 중에 농촌인력으로 차출 (자원형식) ● 흙보산비료 등 퇴비 확보 전투 ● 농자재, 종자,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준비 차질
04.05	평명성 2호 발사	

2.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

1) 2007년 대남 인식

- ① 2006년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 인도적 지원 완전 중단
- ② 2007년 들어서도 식량지원이 없었으나,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기대를 버리지 않음

*남조선 쌀 지원 무소식에 불안감 고조(오늘의 북한소식 제76호, 2007.06.13) - 늦어도 5월말이면, 쌀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6월이 돼도 소식이 없어 주민들 동요가 큼. 적어도 남북교위회담에서 풀릴 줄 기대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자 불안해하는 모습 *쌀 지원 소식과 햇감자 출하로 식량 가격 주춤(제78호, 2007.06.27) -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 소식과 함께 6월 말 햇감자가 시장에 나오면서 식량가격 약간 주춤. - 평안남도 평성에 한국쌀 30마대 나옴. 지난 해 한국에서 지원된 쌀을 보유하고 있던 상인들이 한국의 식량 지원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내놓은 것으로 추정 *빨리 지원 쌀이 들어와야(제90호, 2007.09.19) - 신의주 주민들, 외부에서 지원된 쌀이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림. 빨리 지원 쌀이 들어와야 누구 수중에 들어가는 쌀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말함.	
---	--

③ 2007년 10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평양 방문에 북한 주민들 지대한 관심 보임

남조선 대통령 방문에 큰 기대(제90호, 2007.09.19) - 남조선 대통령이 오면 식량 사정이 풀릴 것이라 기뻐하며 애가뭇 피움 한 무역일꾼 "은 나라 백성들이 하루빨리 한국 대통령이 방문과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여태껏 없던 현상인데,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이제 정부가 아니라 남조선에 삶을 기탁하는 것 같다. 평양으로 부터 이남 대통령이 쌀 30만 톤과 텔레비전 3만대를 가지고 온다고 소문이 떠들썩하게 나있다"고 전함 "정상회담 후 대남 적개심 점차 사라져" "대통령이 많이 젊어 보인다" "주민들, 합의문 중 남북경제협력에 주목"(제93호, 2007.10.10) - 노무현 대통령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졌다고 한 주민들 증가. - 한국에서 2007년 수해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한국이 잘 산다는 것.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왔는데 젊어 보인다. 노대통령이 오면서 쌀, 화물차, 승용차 등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는 얘기 등을 공공연히 함. 예전과 달리 당국에서도 제재하지 않았음. - 10.4 합의문을 전해들은 주민들, 남북경제협력 부분에 주목 - 노대통령 방문 후 별다른 사상강연이 없는 것에 대해, 한 간부, "아마 어렵게 사는 주민들한테 함주자는 생각 같기도 하고, 남조선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 같다. 남파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쪽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포고"라고 해석하기도 함 - 미국의 중유와 한국 쌀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 주민들 기대가 짝음 "무역 거래는 한국과 직접 하라"(제107호, 2008.01.16) - 북한의 무역단위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중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무역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음. - 상부의 허가만 있으면, 해당 상품 부문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감독 아래 한국 측과 직접 무역 할 수 있도록 함. "도 무역회의, '한국에서 대량 식량 지원 들어온다'"(제109호, 2008.01.30) - 중국에서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단속하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퍼뜨린 것으로 추정 - 한 무역일꾼은 도 무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중국에서 쌀, 밀가루, 통강령이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 외화벌이 워크에서도 쌀 무역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 전달받았다고 전함. - "중국에 아까운 외화돈을 허비하며 더 이상 식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과 유엔 등지에서 대량 식량 지원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전함 "제발 우리들까지도 먹을 수 있게 많이 지원해달라"(제119호, 2008.04.09) - 각종 검열 단속과 시장 단속에 주민들 고통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기대함 - "(한국 정부가) 이왕 지원을 해줄 거면 우리까지 먹을 수 있게 지원해 달라...외부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제발 우리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달라"고 신신당부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역을 생각하고 무역을 꿈꾸는가 11

2) 2008년 대남 인식

① 남북관계 급속한 경색 국면에 걱정과 한탄

"이명박 대통령 발언대회 시작"(제120호, 2008.04.16) - 강원도 원산 일본 종교종 장사꾼, 김용선(52세), "이남 정부가 우리나라와 민간 거래도 차단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하긴 차단하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은 없다. 언제 민간이 주는 걸 받아봤어야 안 타깝지" - 한 중간 간부, "...남쪽과의 거래가 모두 중단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까 아득해지기만 한다" - 한 고위간부, "몇 사람들 싸움에 죄 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가게 됐다...공화국이야 그렇다치고, 남조선도 알고 보니 어느 것 하나 공화국보다 나은 게 없이 그저 돌이 똑같다. 백성은 안중에 없고 서로 누가 더 잘났나 한자랑하는 꼴이다. 검둥이와 까마귀 싸움이라 우리 민족의 앞날이 안 보인다...남조선은 정말 우리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거냐?" "남조선과의 관계악화, '굶어죽든지, 싸워죽든지 둘 중 하나'"(제121호, 2008.04.23) - 한 간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TV방송으로 육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 북한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 "이렇게 긴장 상태가 악화되면 정말 둘 중 하나다. 주위 간부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는 굶어죽든지 아니면 싸워죽든지 두 갈래 길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걱정들이 많다" "전쟁에서 죽는 게 굶어죽는 것보다 낫지"(제121호, 2008.04.23) - 굶주림의 고통이 심해지자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증가. - 남포 서경철(49세), "식량 사정이 좀처럼 펴지지 않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어디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으로 탈출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니, 하루빨리 북이든 남이든 한 쪽이 통일하면 사정이 좀 달라지려나. 전쟁이 나서 죽는 것이 굶어죽는 것보다 낫겠다." - 대동군 김송술(48세), "...이렇게 굶어죽을 비애야 정말 하늘이라도 무너져 다 같이 콧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② 거듭되는 실망, 배신감, 불신

"정부는 백성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제127호, 2008.05.20) - 정부 관료들은 식량난 걱정보다 국가안보 우선, "우리 정부는 백성 죽을 것을 각오한다" - 중앙당 간부, "비공식적으로 남한에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남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너무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감히 누구도 말을 못 꺼낸다...외국에서 지원받은 것은 몇 년 전 것부터 몽땅 다 조사 들어간다"
--

“외국을 믿고 일하지 말라”(제131호, 2008.05.26) - 중간 간부들 회의 때마다, 식량 위기는 세계적 현상이니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자력갱생하라는 내용 전달받음 - 회의 참가했던 한 간부, “외국을 믿고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중국이나 남조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올해 남조선으로부터 비료를 못 받고, 따로 수입도 못하는 상황에서...비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옥수수 5만톤 지원하겠다는 리명박 정부 저의 의심스러워”(제142호, 2008.06.03) 평양의 한 중앙당 간부는 “일전에 남조선 리명박 정부의 대변인이 아무리 식량난이 심해서 절반 넘게 굶어죽더라도 벼를 가르치자면 지원을 안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우리 공화국이 당연히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이반에 모른 척하면 반드시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에 먼저 구걸할 것이라 정답하는 등 악랄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사람이 죽어 나가고 지원을 안 해주면 먼저 조선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죽고 나면 민란이라도 일어나서 공화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지원 요청을 하면 주겠다는 남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어려움이 타지더라도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 요청하라는 것을 구걸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 매우 기분 나빠했다. 이번에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도 “조미(朝美)간에 협의가 잘 풀려가니 자기네들이 떠돌면 되는 것 같고, 대북 압박수단이 풀거품 되어가니 처음과 달리 지원해준다고 접근해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어려운 주민들을 돕자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조금 보태주고 우리가 조선의 식량난을 해결해줬다고 선전하자는 것인지 알게 된다.”라고 냉소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협의를 끝냈고, 이달 말까지 간다면 식량위기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으므로 리명박의 싸구려 간계에 넘어갈라 없다. 현재 식량사정이 확실히 어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장군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 식량 해결을 위한 방침을 내리셨고, 일부 중국 측 대방들과 해외의 애국 인사들이 사심 없이 무상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리명박 정부보다 낫지 않느냐며, 남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리명박 정부가 꼭 하지 않아도 될 말로 너무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려놓았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리명박은 실용인지 편지 그저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간 어떻게 쌓아놓은 신뢰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실용이라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

3. 한반도 긴장 위기 속에 가려진 북한 주민의 고통

- 1) 끝나지 않은 식량난
 - ① 식량난 재발
 -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 연간 40만 톤 내외의 식량 지원과 30만 톤 내외의 비료 지원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13

함(60만톤 증산 효과) 따라서 매년 약 100만 톤 내외의 식량 지원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음.

- 특별히 북한 농업 상황 개선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아사, 현저히 감소
-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로 남한 정부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
2년 연속 수해로 식량난 가속화.
- 2008년 제2의 고난의 행군 도래 및 춘궁기 다수 주민 아사 및 취약계층 가정 해체 현상

- ② 군량미 차출 증대
 - 2006년 수해 이후 2007년 춘궁기 대비위해 북한 정부 군량미 및 비축미 방출
 - 2007년 가을 수확 후 군량미 확보로 농민 배급량 대폭 감소(박천 농민 2개월치 배급 사례)
 - 2008년 가을 수확 후 군량미 확보를 위한 중앙당의 방침 하달
군량미 우선 확보 지시 → 농민 식량 부족 → 2008년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아사 자 발생

- ③ 퇴비 반출 사업
 - 2008년 12월 농업성 “농사 준비를 잘 할 데 대한” 지시문 하달
(비료는) 황해도 이외에는 공급할 수 없으니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 준비 독려
 - 농장세대 당 2톤, 기업소 1인 수백kg~1톤씩 요구, 중학생 300kg 등으로 할당
 - 주민들 반발, 과제 달성 못하면 현금 내야함. 과도한 부담에 출근 거부 현상 발생

2) 사회 통제 강화

- ① 국경변 통제
 - 잦은 숙박 검열로 인한 불편
 - 공권력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도강, 밀수, 인신매매, 마약 거래의 온상이라는 혐의)
- ② 휴대전화·시외전화 사용 금지
 - 외부와의 통화 제한, 사용 시 벌금 부과하거나 간첩 혐의 적용
 - 탈북자 가족과 연락 장애
 - 장사, 안부, 가족 경조사 등 일상 생활에서의 통신 장애
- ③ 주민 이동 통제
 - 국경변에서 여행증 없는 사람은 구류장 수감

- 행사없는 친척 방문자도 심문 대상
- 광명성 2호 발사 앞두고 성인남자들에게는 여행증 발급 중단
- ④ 검열 강화
 - 잦은 국가 검열(2007년 보위부, 안전부 등 대규모 검열만 10여 차례 이상 진행됨)
- ⑤ 선군 이념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 애국미 • 돼지고기 바치기 운동
 - 군인 횡포에 장사하는 주민들 피해 심각
 - 군인 강도 • 절도사건 증가
- ⑥ 불법 녹화물, 선전물 단속
 - 최근 외국 영화, 특히 한국 영화 CD 보거나 배포한 사람을 집중 처벌
 - 2006년까지는 비교적 관대하던 북한 내에서 한국 문화 급속히 위축됨
 - 한국으로 간 탈북자 가족 추방, 한국 영화 본 사람은 교화소 보내고 가족은 추방

3) 끊임없는 정치사상교양

- 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적 표현을 동원하여 사상성 강조
- ② 2008년 5월 간부 대상 교양 자료에서 사상성 해이 경고
 - “사업에 열정이 없이 일한다.”
 - “국가 재산을 제멋대로 낫내기하거나 부정처리하는 현상이 있다.”
 - “지원물자를 보낸다면서 주민들에게 세의부담을 거둔다.”
 - “자기 단위 리악만 생각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경영관리를 한다.”
- ③ 간부들에게 당적 • 계급적 원칙 견지 호소
 - “인민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 본위주의”
- ④ 식량위기를 세계적 식량위기의 일환으로 선전 [P](#)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15

● 발 표 2 ●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북한 시장의 양상
2. 시장화와 체제침식
3. 시장통제의 강화
4. 체제단속과 대외관계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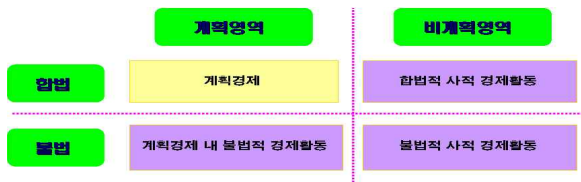
1. 북한 시장의 양상

■ 북한에서 시장화는 1990년대 경제난을 배경으로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2003년 3월 7.1조치의 후속조치로 종합시장이 설치되고, 합법적인 시장거래 주체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

- 과거 농민시장에서는 텃밭 등에서 생산된 일부 농산물을 개인 차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은 물론 협동농장을 포함한 협동단체, 그리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국영 공장/기업소도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금지되었던 쌀, 옥수수 등의 곡물판매와 소비재 공산품 판매도 가능

■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은 단순히 농민시장이나 종합시장 등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계획경제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활동 일반, 이른바 '제2경제' 일반을 지칭

<북한에서 시장의 유형>



남북관계 건강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17

■ 합법적 사적경제활동: 텃밭/부업밭/폐기밭, 가내작업반/부업반, 계획외생산 등

- 폐기밭은 원래 半합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가 7.1조치로 합법화되었으나 2007년경부터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다시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불법화
· 현재 북한 농업생산물의 20~30%가 텃밭/부업밭/폐기밭 등 사적경작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약 20만 정으로 추산
- 1984년 8.3운동에서 시작된 가내작업반/부업반은 원래는 부녀자나 연로자들에게만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근로자들도 직장에 '8.3돈'을 내고 가내작업반 등 부업 활동에 참여
- 계획외생산: 국영기업소가 시장 판매용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공장 가동의 일부를 할애하는 형태
· 원래 불법이었으나, 7.1조치 이후 소비재 생산의 20~30%를 계획외생산으로 허용. 2007년에는 생산재의 경우에도 5%선에서 계획외생산을 허용했다는 소식 (미확인)

■ 불법적 사적경제활동: 지하공장, 사금융, 밀무역, 기타 외화암거래/주책거래/개인사업 등

- 지하공장: 가내작업반보다 규모가 크고 자제조달/생산/판매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분업화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이나 가족단위가 아닌 '임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청을 맡겨 생산하는 등 자본주의 초기형태
· 초보적이기는 하나 '노동시장'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06년 개인고용 금지령
- 사금융: 장사로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이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부해주는 형태로, 개인장사꾼을 대상으로 한 사채놀이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국영 기관/기업소, 협동농장에까지 침투 (자재나 상품구입비, 운영비 등을 대부해주고 기업 판매수익의 일부를 회수)
· 생산물시장, 초보적 노동시장에 이어 초보적 형태의 자본시장이 등장
- 밀수: 북한상인들이 국내유통을 목적으로 중국 등에서 물건을 구매해 들어오는 형태
· 특히 2000년대 이후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 연간 3~5만 톤의 식량이 밀수 (2007년 경부터 중국으로부터의 곡물밀수 단속이 엄격해짐)
· 2008년 단동지역 인민폐 현금유통량(출입국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현금)은 북한→중국이 약 19억 위안, 중국→북한이 약 21억 위안)

- 계획경제 내 불법적 경제활동: 위장판매(송이버섯-수산물), 가격 부풀리기, 왁꾸거래, 자재뒤틀거래 및 생산재시장, 물품유통
 - 가격 부풀리기: 개별 무역회사가 외국과 합의한 수입가격보다 부풀려 무역성에 보고하고 그 편차만큼 이익을 챙기는 형태
 - 왁꾸거래: 자신에게 할당된 수출입물량 허가증(왁꾸)를 타 기업에 돈을 주고 판매하는 형태(강철 1톤 당 왁꾸는 500달러)
 - 생산재시장: 기존의 물물교환 형태의 자재뒤틀거래나 국가가 매개된 '사회주의물자교류 시장'에서 더 나아가 생산재를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형태

2. 시장화와 체제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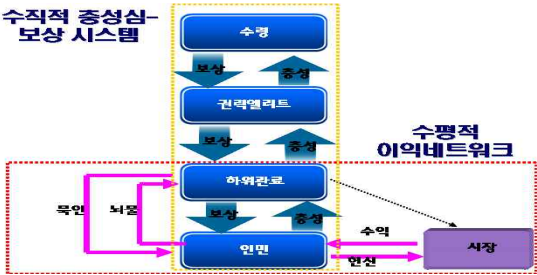
- 수직적 충성심의 체제와 정치적 안정
 -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안정은 위로부터의 강제통제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순응에도 기초
 -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낼 국가의 능력이 저하될수록 국가는 강제와 통제에 의존하게 되고, 그럴수록 정당성의 위기에 노출
 - 사회주의에서 자발적 순응의 기제는, 혁명적 사회개조기에는 주로 이데올로기와 사상 개조에 의존하지만, 혁명기가 지나고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물질적 인센티브가 점점 더 중요
 - 사회주의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국가공급(배급제), 그리고 지위에 따른 물질적 특권에 의존
 - 그런데 고전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 혹은 당이 모든 생산적 자산과 경력이동의 루트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인센티브는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의 충성심 역시 오직 “아래에서 위로”만 향하는 구조가 형성. 이것이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혹은 응집력의 기초인 수직적 충성심의 체제²⁾

1) 만해봉, “2008년도 인민페 현금의 조선변경에서의 유통상황” 에 관한 조사분석 (2009.3.7)
2) Andrew Walder,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시장화와 수평적 이익의 네트워크

- 어떤 이유에서건 시장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주민들이 대안적 소득원천을 발견하게 되면 주민들의 충성심은 사회주의체제를 향한 위로의 운동만이 아니라 시장을 향해 수평적으로 분산
- 특히 사회주의에서 시장화는 경제난을 배경으로 확산되는데, 경제난이 심각할수록 충성심의 분산 현상이 심화되며, 만일 국가가 더 이상 생필품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위를 향한 충성심의 운동은 중단되고 시장애의 헌신이 보편화
 - 1996년 김정일이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대해 ‘무정부상태’라 표현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
- 경제난을 배경으로 시장이 확산되면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하층 관료들까지 시장 활동에 개입
 - 뇌물을 매개로 한 간접 참여일 수도 있지만 직접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
- 시장 활동이 확산되면 주민들 사이에 경제적 계층분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상층에 위치한 소수(북한에서 이른바 ‘돈주’)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경제 질서가 조직화되면서 시장 세력(market force)과 중하층관료간의 수평적 이익의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화
 - 이러한 돈주 아래로 도매상-소매상 등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식량사정을 파악, 시장에 식량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식량가격을 조정

<시장의 확산과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3. 시장통제의 강화

■ 시장화의 확산으로 체제침식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했는데, 북한에서는 2005년 후반기부터 시장통제가 본격화

- 2005년: 식량배급제 부활
- 2006년: 만 17세 이상 성인남성 장사 금지, 개인교용 금지
- 2007년: 중국으로부터의 곡물밀수 및 협동농장 곡물유통 엄격 단속, 비공식 무역회사 정리방침, 군량미 및 수도미(평양 공급쌀) 확보를 위한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검열그루빠) 황해도 파견, 장사허용 여성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 시장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통제(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 시장 지역 외 장사금지 및 직장 복귀 조치, 비배관리(6개월 농사: 농장의 저질경작지를 기관/기업소에 임시 분여하는 방식, 2004년 도입) 중지, 사적경작 엄격단속(폐기밭에 고유의 세금부과)
- 2008년: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지역 및 군부대 무역회사 집중검열, 이동시 1인당 식량보유량을 10kg 이하로 단속, 2009년부터 상설시장을 폐쇄하고 10일장으로 회귀하는 지시 하달³⁾ (주민 및 하층간부 반발로 6개월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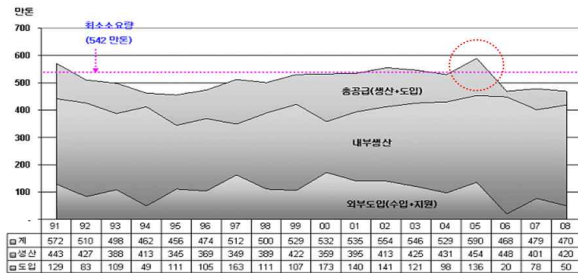
■ 왜 하필 2005년인가?

- 대미관계 요인: BDA 금융제제 때문?
 -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의 금융제제가 시작: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 위기 재발로 7.1조차에서 기대했던 북미, 북일관계 개선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공식경제 내부로 수용하는 등 개혁조치를 지속했으나, 또다시 BDA 금융제제가 부과되면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다”는 보수노선이 부각했을 가능성
 - 이 시기 북한이 2006년 미사일 실험, 핵실험 등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미대결을 위해 체제내부 단속에 주력했을 가능성이 존재
 - 그러나 이러한 외부요인론만으로는 2007년 이후 2.13합의, 남북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호전에도 불구하고 시장통제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됨

3) 종합시장을 10일장 형태의 과거 농민시장으로 회귀, 시장에서 개인재배 농산물만 거래를 허용(2007년 공산품 거래 금지에 이어 협동농장 등에서 생산된 초과생산물의 거래를 금지), 전문상인의 매대 독점 금지 등이 주요 내용.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21

<북한의 식량공급 추이>



- 경제적 요인: 2005년 식량공급량이 1991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
 - 식량난과 이로 인한 식량배급제 폐지는 시장 확산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식량공급량의 회복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구체제로의 복귀에 자신감을 갖을 가능성
 - 그러나 2006년부터 식량사정이 다시 긴급해졌음에도 시장통제조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일면적
- 정치적 요인: 정책주도그룹의 변화?
 - 대외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감정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 대외환경이나 식량사정 등이 다시 변화했음에도 시장통제 정책이 지속된 것은 북한내부에서 정책주도그룹의 역학관계와 관련된 듯
 - 박형중 박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수용조치는 2003년 9월 박봉주 총리의 취임과 2004년 2월 장성택의 실각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시장통제조치는 2005년 12월 장성택의 재등장과 2007년 4월 박봉주의 경질을 전후하여 본격화되었음
 - 특히 2004년 9월~11월 노동당 개편을 통해 당 경제정책감열부와 농업정책감열부가 폐지되어 경제정책에서 내각에 힘이 실렸으나, 2005년 9월 당에 계획재정부가 신설되어 박남기 전 국가계획위원장이 취임하는 등 다시 경제에 대한 당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고, 2007년에는 장성택이 공안을 담당하는 당 행정부장에 취임하면서 시장통제가 본격화⁴⁾

-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김정일이 장성택을 재등장시킨 정치적 이유(단순히 사회통제력 회복이 아니라)가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 (2005년 12월 김정일의 후계논의 금지와 연관?)

4. 체제단속과 대외관계

■ 한계에 부딪친 시장통제

- 주민들과 일부 지역관료들의 반발로 시장통제조치가 전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태일리NK, 좋은벗들 등)
- 북한당국으로서도 시장통제는 딜레마
 - 체제이완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을 단속해야 하지만, 국영유통망에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단속은 오히려 암시장화를 부추겨 시장에 대한 통제불가능성만 증대하고 결국 정부의 세수감소로 연결
 - 절대다수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먹고사는 상황에서 시장통제는 사회적 불만요소를 가중
 - 시장단속을 해야 하는 주체인 지역관료, 하부관료들이 주민과 결탁되어 있어 시장통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곤란 → 이 때문에 ‘미사그루뵈’ 등 중앙검열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

■ 남북관계를 활용한 우회적 내부통제

- 시장통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사회기강 다잡기에 우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김정일 건강문제가 항상 참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당국은 내부 체제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통제조치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 경색국면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음 ⁹⁾

4) 박형중,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8.12.23)

북한주민이 원하는 삶과 희망에 대하여

리성옥 새타민

1. 임원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2. 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3.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25

토론문 1

임원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 북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진정한 나눔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

1. 1:1 주고받음의 법칙

- 1) 조건부의 인도적 지원은 신뢰를 쌓을 수 없다.

계산된 주고받음은 지원이 아닌 사업으로 지원과 사업은 명확히 분류해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인도적 지원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가나 단체 개인에게 조건 없이 긴급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통례라고 본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동포를 돕는다고 말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조건을 붙여 지원을 한 결과 남북간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 극한적 대치 상황이었던 1990년대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 2)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남북경협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남북경협 사업은 정부주도보다는 사업의 주체인 민간기업 중심의 대책과 실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직된 사회구조의 북한과의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남북간 민간 상호협력 사업을 통한 신뢰 구축

- 1) 농업지원
 - 연구 기술지원 공동사업
- 2) 의료지원
 - 공동연구 교육, 의료장비 지원, 의료용품 및 의약품 지원
 - 기존의 진료소 활성화 지원
- 3) 민간 복지지원
 -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등 복지 시설 개보수 및 식량지원 등

3. 평양과학기술대학 활용 방안

평양의 강남 33만평의 부지에 4만여 평의 건물이 지난해 말 완공 되어 개교를 준비 중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연구소와 지식산업복합단지를 활용하여 남북 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24시간 전력이 보장되고 모든 안정적 기반이 갖추어진 통일을 준비하는 이 사업은 국가와 단체 기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우리 동포들이 모두 참여하여 남북이 함께 나눔을 실천의 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평양과학기술대학부설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
PUST Pyongyang Knowledge Industry Complex

- 설립목적 : 남북이 함께 동북아 지식산업 Net-Work의 중심이 되어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 최초의 평양 주재 남북 기술 교류 협력단지
 -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지식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남측의 운영 인력이 평양에 상주하여 북측의 인재들과 공동연구 및 산업개발을 진행하는 최초의 지식산업단지
 -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협력 기반 산업단지
 - 미래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산학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 북측이 보장하는 남북 경제의 중심단지
 - 진출 회랑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남북경제협을 위한 중심점
 -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Net-Work 구성 중심
 -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교육, 문화, 과학기술, 경제교류의 Net-Work가 형성되어 평화적인 교류협력 기반이 조성.
-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장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 순실대학교 철학과 졸업, 영국 칼리프톤 대학 철학석사, 미국 베리안 대학 철학 박사, 87-91중국사회과학원 초빙교수, 89-현재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경제고문, 92-현재 연변과기대 총장, 2001 -현재 평양과기대 설립 총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서울대 공과대 화학공학사, 미국 메릴랜드 대학 공학박사, 미국 카톨릭대 전산학과 교수 역임, 포항공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역임,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포항공대 대학원 원장, 2003년-현재 포항공대 총장
	한뎀 김리스 미국 라이스 대학 전 총장 미국 플로리다 대학 학.석사, 일리노이 대학 경제학 박사(개발경제학), 듀크 및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역임, 듀크대 사회과학대 학장, 1993 ~ 2004 라이스대학 총장 역임, 미정부 국제금융기관의 고문, Halliburton 이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문위원, 독일 브레멘 대학 설립.

● 설립연혁 :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 2001년 5월 2일
교육성 평양 과학기술대학 및 지식산업복합단지 설립승인
- 2001년 6월 5일
통일부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승인
- 2002년 6월 12일
평양과학기술대학 /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 착공
- 2005년 5월
동북아 산업지원센터 착공(중국)
- 2008년 11월
동북아 산업 지원센터 준공 예정 /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 1차 준공예정
- 2009년 2월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 입주
- 2009년 5월
평양과학기술대학 개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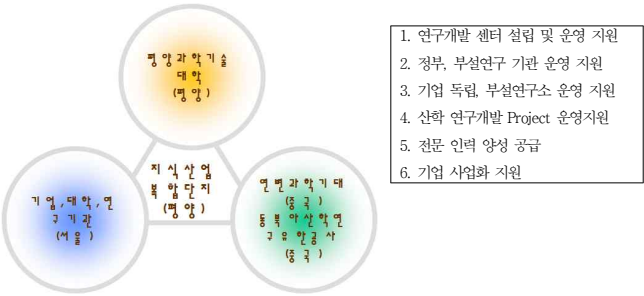
●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학과 : 2007년 4월 개교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 농업식품분야, 경영경제분야, 의료보건분야, 정보학부 등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한 과학자 100여명씩 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소를 세웁니다.

● 설립규모 : 하나됨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지식산업 교류의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 갑니다.
본 부지는 평양시내 중심에서 평양-개성간 고속화도로 진입로 약 5km에 위치하며 전체부지는 1km×1km 정방형의 약 33만평이다.

장 소	평양시 낙랑구역 승리동 보성리, 평양과학기술대학
대지면적	100만m2 (33만평)
시설면적	약 8만m2 (2.8만평)
투자규모	초기 약 400억 원(중장기 약 1,500억 원)
지식복합단지	연구소 1,200평 / 산업센터 1,400평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29

● 사업목표 : 고급기술인력과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조성하여 동북아 협력의 Net-Work를 구축합니다.



● 입주 연구소 추진현황

1차 7개 연구소(2009년 입주 예정)	2차 8개 연구소(2010년 입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건의료기술연구원 지하자원연구원* 국제특허법률연구원 농업과학기술연구원* 방송통신 연구원 IT 융합기술연구원	산업디자인 연구소 국제법률 연구소 기상관측연구소 건설공학연구소 물류관광연구소 건축엔지니어링연구소 에너지개발연구소 전자생활용품연구소 의료용품개발연구소 의약연구소

1.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판단

- 2003년 종합시장 설치에 북한당국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7·1 조치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확산된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으로의 편입으로 해석할 때, 종합시장은 7·1 조치의 보완책으로서 성격을 지님.
 - 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7·1 조치 및 이후 일련의 조치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 증대를 통해 경제 회생과 성장을 추구하려는 목적임.
- 따라서 종합시장의 설치에 밀로부터의 변화와 요구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당국의 위로부터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사례: 2003년 로마회의
- 적어도 7·1 조치와 종합시장을 개설 당시 북한당국은 계획을 주(主)로 하되 시장 기제를 종(從)으로 하는 ‘북한식 계획경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북한 경제청사진의 role model은 「1960년대 헝가리」였던 것으로 이야기됨.
 - 사례: 북한 내각의 경제학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실패했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시장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동력을 평가 절하한 것인 데다가 자본 투입의 실패로 인해 북한당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됨.
 - 2003년 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계획의 확대와 위축 혹은 시장의 활성화와 축소는 결국 이러한 딜레마의 표출인 셈임.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31

2.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적 성격

- 7·1 조치는 관당·장군의 관료로 하여금 지대추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함.
 - 더욱이 비공개적이고 상명하달 식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대추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함.
- 따라서 관련 고위급의 입장에서는 7·1 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보다는 축소되는 것이 지대 획득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
 - 사례: 2008년 봄 민화협 관계자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일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지시가 없는 한 시장의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정책주도 그룹에 대한 이해

- 박봉주, 박남기, 김광림 등은 실무 테크노크라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들과 장성택을 같은 레벨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짐.
 - 사례: 2002년 경제고찰단
- 박봉주 등을 단순히 ‘개혁론자’, 그리고 장성택을 ‘보수론자’로 분류하는 것도 실상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큼.
 - 사례: 장성택과 신의주
- 오히려 이들과 장성택은 같은 성향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경제문제에 대한 문책이 실무자에게만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음.

1.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첫째, 사회(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제공되는가?
 -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가?
- 둘째, 개인들에게 기본 요구(생계를 포함)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 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는가?

2.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

- 그동안 북한에서는 국가수준의 생계수단 제공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정부차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자유)를 제공받고 있는가가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차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남북경제 협력과 경제지원이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 보장' 수준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33

직접적이면서 핵심적인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제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필요할 것임.
- 실제로 시장활동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가 강화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시장의 폐쇄 소문과 조치의 6개월 연기 소식, 수매장점의 역할 강화 조치, 가장 최근의 장마당 판매금지품목의 공시 등의 조치들은 북한 당국이 시장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을 무역기관들이 양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행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시장 판매금지 품목에서 식량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임.
- 이러한 사실은 북한당국이 시장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최근 조치들의 본질은 무엇일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함.

■ 최근의 조치들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시장 폐쇄를 겨냥한 것일까?

- 혹시, 시장관리체계의 개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시장관리체계의 개선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내용은 무엇일까?
- '시장의 상점화'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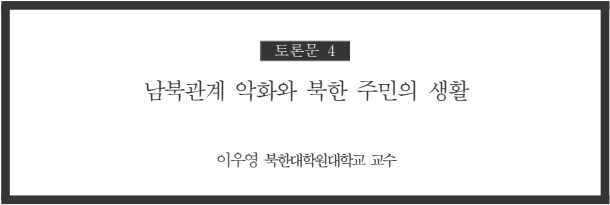
■ 북한당국이 시장 폐쇄를 의도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가?

- 북한주민들의 반발은? 시장에서 기본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가?
-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시장활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취득한 계층(집단)의 반응은? 그들의 상실감과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3.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

- 남북관계가 북한의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 남한 상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북한의 시장화 현상 촉진 효과),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 급증, 북한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체제위협 요소로 인식
 -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남북문제를 빌미로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 경공업 원부자재의 대북지원으로 계획부문에서 신발 등의 생산이 증가, 그 일부는 시장으로 유입됨(계획경제부문과 시장활동의 연계성 촉진 효과).
-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 북한당국에게는 남한상품의 유입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른 부담감 감소 효과,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명분의 약화, 시장관리체계의 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 반면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보다 구조화할 가능성 (최근 20억 달러의 차관이 향후 10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는 협정 체결 소문)
 -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선 일차적으로 북한시장에 대한 물자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됨. P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35



1. 2008년도 남북관계

- 이명박 정부 수립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금강산·개성 관광의 중단 및 개성공단 축소
 - 당국간 접촉 전면 중단
 - 이산가족 상봉무산
 - 상호비방 격화
- 남북관계 경색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비핵개방 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천명
 - 북한내 보수파의 득세 등 내부 정비
 - 박왕자 사건 등 돌발적 요인
- 북한핵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간 대화 단절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대북교류는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임.
 - 하반기 이후 대규모 방북 지속
 -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교류도 지속

2.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주민의 생활

■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남북관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정책은 통제정책의 강화여부, 시장 등 사적·비공식 영역의 용인 여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공급 상황 등
- 남북관계는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남한의 대북지원 정도 등
- 대외관계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국제적 지원 정도 등
- 북한주민의 인식은 외부정부의 유입, 시민의식의 성장, 체제에 대한 충실도 등

■ 북한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과 남한과 국제적 지원의 축소는 발표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정치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음.
- 정치적 억압도 강화되면서, 빈곤도 심화되는 경향

■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면서 일종의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 정부의 강경한 대내정책의 근거가 되고,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강경정책은 대외지원의 축소로 이어짐
- 남한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미국과의 극적인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북한 당국이 강경한 대외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
- 특히 그 동안 남북화해협력 기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

■ 남북관계의 변화와 시장 확대, 대외 정보 유입 확산 등 그 동안 북한주민인식 변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상 부분의 사회구조적 변화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정치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37

- 개인주의의 확대, 시장주의의 확산 등 의식변화 진행
- 배급제의 실질적 와해, 시장구조의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진행
- 일상적 차원의 변화가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필요
- 일상적 차원의 변화가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의 공유, 대항 집단의 조직화 등이 필요

■ 악화된 북한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킬 만한 긍정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08년도에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대외적 지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부족
-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도 지속될 가능성 큼

■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악화된 북한의 일상에서 북한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순응할 가능성이 크지만, 식량부족이 지속되고 억압적 통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저항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각종 선전·선동을 통한 사상적 통제나 물리적 억압을 무제한 지속하기는 어려움.
- 이미 구축된 대외 정보 전달 통로 등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어려우며, 경제난과 밀접하게 연관된 배급체제의 복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통제정책의 효율성은 과거보다 약화

■ 사상적 통제나 사회적 통제의 효율성이 약화되는 경우 물리적 통제 기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억압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표면적인 안정과 내부적으로 사회구조적 모순이 심화가 병존할 수 있을 것임. **P**

[평화재단 제30차 전문가포럼]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NOTES

[평화재단 제30차 전문가포럼]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NOTES

[평화재단 제30차 전문가포럼]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NOTES